

불체포특권 포기, 말장난하지 말고 법을 바꿔라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에 뒤집으면서 “말로 어디 해봤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바로 아니냐”고 했다. 이게 그의 진심일 것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불체포 특권은 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기 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부는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여부 동의 권한인지 의원 개인이 행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 의원이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의원들이 서약서 쓴다고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치 공세나 캠페인 차원에서 헌법상 제도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김 의원 말이 맞다. 17세기 영국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제도 자체가 문제

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법망을 벗어나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이를 악용한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지금 당장 헌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어도 방탄 국회 제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용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재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요구하면 15일간 임시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회를 열었다. 보통 임시회가 한 달씩 열리는 데 방탄용이 분명한 경우 일정 수의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보름 동안은 임시회를 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검찰은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헌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탄 국회를 막는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아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의원들도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야 의원들끼리 말싸움만 하고 있다. 어쩌면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니 그럴 것이다. 그래도 영장의 양심이나 진정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했으면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쇼’ 정치인 말은 뒤집으면 그만 포기 선언이 진심이라면 ‘방탄 국회 방지법’ 논의해야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 여부 동의 권한인지 의원 개인이 행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용 의원이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의원들이 서약서 쓴다고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치 공세나 캠페인 차원에서 헌법상 제도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김 의원 말이 맞다. 17세기 영국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제도 자체가 문제

김준의 맛과 색 [152]

통영 청각초무침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다. 청각은 깻배이나 돌에 붙어서, 봄에 자라 여름에 많이 채취한다. 대부분 말려서 겨울 김장철에 사용하지만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자선어보에 ‘맛이 담백해서 김치 맛을 돌준다’고 했다. 김치가 쉬 쉬지 않도록 짭쌀 발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김치를 담글 때 더하는 재료로 이용했다. 막 채취한 싱싱한 청각은 초무침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좋은 청각은 줄기가 통통하고 색깔이 짙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다. 이런 청각을 발이 좋은 날 하루에 말려야 향이 좋다. 생청각이 없을 때는 마른 청각을 물에 불려서 사용하기도 한다. 청각을 바라바라 주물러 씻은 다음 거친 뿌리를

제거하고 살짝 데친다. 청각 자체가 수분을 많이 품고 있어 반드시 물을 넣지 않고 데쳐야 한다. 데친 청각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맛이 있다. 여기에 양파, 파, 고추, 깨소금, 설탕, 다진 마늘, 정갈, 된장 등 갖은 양념을 더한 새콤달콤한 청각초무침이 여름에 좋다. 통영에서는 청각초무침에 흥함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각냉국은 식초를 넣은 물에 설탕과 소금을 녹인 다음 생강즙을 넣어 데친 청각에 부어 차게 먹으면 좋다. 시원한 청각냉국이나 청각초무침으로 더위를 날려보자.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6년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대전 고법원장 취임사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했다. 실제 지금의 사법부 현실은 참담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법 출신으로 채웠다. 그 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쏟아졌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이면 사법부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 하급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3년 전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판사가 정치를 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무려 3년 2개월 걸렸다. 얼마 전엔 판사가 돼서도 ‘친민주당’ 성향 글을 쓴 판사가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이례적으로 징역 6

개월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다. 판결을 제 정치 무기로 쓴 것이다. 이균용 지명자는 2년 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재판 원칙이지만, 그것이 전체 법관들에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균용 지명자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너진 사법 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 고통이 커졌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2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는 편해지고 국민은 괴로운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 폐해도 없어야 한다. 쉽지는 않다. 법원에 정치 그릇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 대रो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 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돌 건너간단다.



日 오염수 방류,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 거의 매일 측정 발표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오염수 134만톤을 방류 기준에 맞게 정화 처리해 내보내는 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한다. 방류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으로 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횡집 등 수산업체에 당분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기인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사실상 ‘0’이 아니 마진가치라는 많은 과학 연구 결과가 있다.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한국 해역으로 올 때 남아 있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사정도 딱하기는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달리 도리가 없어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다. 수증기 방출, 심지층 주입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해양 방류보다 생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인접 국가 국민 입장에서 방류가 꺼림칙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

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많은 국민 생각도 비슷할 것이다. 일본은 자국 문제로 한국민에게 한국 정부에 여러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을 새겨 봐야 한다. 한국 어민들과 수산업체도 대부분 방류로 인해 바다 또는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에는 남에게 폐(弊·메이와쿠) 끼치는 것을 극구 꺼려하고 폐 끼쳤을 경우 죄송해하는 관습과 문화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업체와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뭔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청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번 방류의 몇 만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을 없애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한국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매일 하다시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 불안은 사그라들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입을 우리 수산업체 피해다.

킬러 문항 판매 교사들, 학교 수업에도 그런 열의 있었나

300명 가까운 현직 교사가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모의 문항을 만들어 주거나 임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가 45명이고 경기도 의 한 수험 교사는 5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했다. 분업이 사교육이고 교사는 부업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다.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교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8명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직원처럼 일하고 그 대가로 큰돈을 받았다는 것은 공교육이 무너진 현상 그대로다. 해당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선을 대고 문제를 출제하는 열의와 노후를 학생들에게 쏟았으면 우리 공교육이 지금처럼 무너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자진 신고를 받으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받은 돈이 단순히 문제 출제, 교재 제작, 컨설팅 등 대가라

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출제 경향 제공 등 다른 목적이 있는 비정상적 거래일 가능성이 의심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성의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조사에서 학원에서 돈을 받은 교사 중 일부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 범죄 행위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사교육 업체와 또 다른 형태의 부적절한 거래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와 감사원은 전수 조사를 통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지금 교사들의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뒷면에서 많은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본분을 포기하고 학생들에게 ‘학원 가서 공부하러’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보통 문제가 아니다.

4.10 총선에서 이기려면... 모든 결정, 윤 대통령이 하도록 하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우파 분열하면 8개월후 총선서 필패할 것 | 어떻게 얻은 3.9 정권교체인데... 죽 써서 버리게 생겼다

우파 내의 4갈래 범주
2024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선거에서 지면 대한민국 전영은 정파를 막론하고 말할 것이다. 말해 싸다. 말할 경우, 그것은 심중팔구 분열로 말할 것이니까.
이래서 △ 윤석열 대통령(1) △ 국민의힘(2) △ 6070 강성 우파(3) 그리고 △ 강성 우파의 보수성을 싫어하는 2030 비(非) 좌파(4)는, 지금 모두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4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것인가?”를 놓고서,
산술평균적 어중간 노선의 국힘
왜 이 네 가지 범주(範疇)를 하나의 비(非) 좌파로 합쳐 보지 않고 따로따로 쳤는가? 네 생각이 다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1)과 국민의힘(2)이 우선 다르다. 8.15 경축사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 다수는 우(右)에서 좌(左)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좌익이란 뜻은 아니다. 산술평균적 ‘어중간 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극단 운동권을 향해 공산 전 체주의라고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다가 우파 취

급받게?”라는 게 그들의 우려다. 우파 취급받으면 수도권 선거에서 낙선한다는 노이로제다.
강성 우파(3)는 어떤가? 그들은 국민의힘에는 크게 실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 외교·안보 정책]엔 크게 공감한다. 이 세력은 응집력이 강하다. 그러나 얼마나 다른 흐름과 ‘연대’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강성 우파의 응집력을 ‘교섭적’이라 보는 또 다른 비(非) 좌파(4)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反) 국가 전체주의] 공격을 “과했다”라고 한다. 최근엔 ‘제3 지대 신랑’을 떠올리는 듯한 켄새다. 이들의 궁극적인 항배도 확실치 않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언론은 어쩌나 하는 것이다. 좌익 언론이야 물론, (1) (2) (3) (4) 모두가 다 왕창 망할 길을 부추길 것이다.
문제는 비(非) 좌파 주요 언론들의 향방이다. 이들은 ‘어중간 기회주의’ 국민의힘(2)이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1)을 끌고 가면서, 강성 우파(3)를 소외시키고 이들에 대한 (4)의 반항을 부추겨, 자기들이 총선 후 세상의 고비를 잡으려 할 것이다.
이상의 네 범주 (1) (2) (3) (4)가 2024 총선 때 어떻게 분열로 가지 않고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자유대헌민

국의 생각이 달려 있다.
윤 대통령, 국힘 기회주의에 업하지 말아야
결론을 내리자. 총선에서 비(非) 좌파 표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반(反) 전체주의 자유 국민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 (1) (2) (3) (4)가 각자의 다름을 일단 유보하고,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 한·미·일 협력 +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 공천과 선거 관리 등 총선정국에서 (윤석열 헤게모니(주도)가 국민의힘(2) 기회주의에 묻히거나 업하지 않았으면 한다.
★ (3)과 (4)를 갈라치는 일이 억제되었으면 한다. (3)과 (4)는 결코 다르고 물도 다르다. 다만 총선 정국에서만은, 이 다름을 쓸데없이 부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언론이 문제다.
정도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노선
다소 보수든 다소 진보든, 다양한 대한민국 자유인들이 담겨야 할 공동의 큰 그릇은 결국 자명하다. 기회주의 중간파 아닌 올바른 ‘진짜 중용(中庸)’의 너른 마당이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의 틀 안에서 보수도 하고, 진보도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liberalism) 우파와 반(反) 전체주의 진보(democratic left)의 길이 그것이다. 이 양안(兩案)이 2024 총선에서 <극좌반(反) 대한민국> 계열을 고립시킬 <자유 국민연합>의 큰 테두리 아닐까?
류근일
뉴데일리의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
윤대통령, 반일종족주의 걷어차고 <캠프 데이비드 체제> 이끌어 냈다
김종인·이준석·천하람 류의 궤변... 이재명 '발끈'보다 더 역겹다
윤대통령, 공산전체주의와 그 맹종세력에게 전면전 선포했다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8월 21일 게재 되었습니다.